

“유아교육 개선에 지혜를”

文대통령 “에듀파인 꼭 필요...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에 유치원 개혁 연기 과동이 마무리된 상황을 거론하면서 “함께 애써주신 분들 덕분에지만 남은 숙제는 여전하다”며 이렇게 적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개혁 연기로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셨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정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은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는 밝다”며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 개선 방안에 지혜를 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박주현 의원,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강력 비판

“소규모 영세농 위한 정책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산출신인 박주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 폐지 후 공익직불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수 있는데 굳이 쌀 변동직불금 폐지와 직불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영세농을 위한다면 농업과 농촌을 죽이는 고약살우의 결과가 되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 쌀 고정직불금, 쌀 고령직불금, 쌀 고령직불금, 쌀 고령직불금, 쌀 고령직불금 4가지를 통합해 2020년부터 모든 작물에 같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영세농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제로 개편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박주현 의원은 “우루과에 따른 UR 협상과 FTA 체제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농업을 지키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만든 정책이 쌀 직불제”라며 “FTA 등의 농업시장개방에서 농업을 지킬 대안은 직불제 통합이 아니라 현재의 직불제를 유지하면서 농업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의 대응 중심 논농사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정부정책에 부응해 대규모의 경작을 하는 대응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현 의원은 현재 10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1ha까지에 한해서 200만 원으로 증액시키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급해 소규모 영세농 및 고령 농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도, 세입징수 전국 최우수... 교부세 인센티브 ‘역대 최고’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제고와 체납액 축소 성과

전북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징수를 제고와 체납액 축소 성과로 2019년 보통교부세 50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에서 월등히 높은 역대 최고 규모로 전북 대도약 실현을 위한 도정 주요사업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그간 지방세 확충을 위해 도와 시군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현장징수 활동을 전개하였고,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98%를 달성(전국2위, 전년대비1.6%↑)했으며, 체납액을 139억원 축소해 보통교부세 461억원을 확보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도·시군합동 체납자 현지 방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 체납액 징수

율을 2016년 12.8%에서 2017년 14.5%, 2018년 17.9%로 최대 5.1%까지 상승시켜 체납액을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42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503억원의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금융우대를 지원하고, 마을세무사를 통한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세정을 운영하여 실질납세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행안부가 주최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체납징수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특별교부세 75백 만원을 수상했다.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자체의 우수 재정개혁 사례를 발

굴 전파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세분야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우수과제 20건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세연구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세입확충을 도모하고 재정개혁사세를 타 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함으로써 선진 지방세정운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북도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거주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징수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책임 강화해 자치분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재정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최승함 승함한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 창원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앞 옥포만 좌승함에 올라 인근 항정으로부터 대함경례를 받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안중근 함, 독도함, 순원일함, 서해 류성룡함으로부터 해상사열을 받았다.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살리기 발걸음 분주

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인력·자재 사용 협조 요청

전북도는 도내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잔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5일 새만금사업단 및 새만금 14일 새만금개발청을 연이어 방문한다. 방문 행보 첫날인 5일 전북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민

관 합동으로 새만금사업단 및 새만금 농생명용지1-1공구 조성공사장 등 11개소 사업장을 방문하여 도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인력과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하여 줄 것과 건설공사 추진시 불

법하도급 방지, 체불임금 예방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도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대형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건설자재의 우선구매, 인력 및 장비 활용, 건설산업기본법 준수를 당부하여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대형건설사 호남지사장단, 건설단체연합회를 비롯한 14개 시군 건설활성화 담당 과장까지 확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결의대회를 열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시책 설명 및 건설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으며, 건설산업의 어려움 해소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형건설사·건설현장·발주기관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2019년도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에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하여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하도급 60%이상을 명기토록 권고했으며, 지역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계획(설계)단계부터 국제입찰대상 및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 참여 및 지역생산 자재 구매 및 인력, 장비를 활용할 것을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인재개발원,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준비과정' 개설... 국제·경제·평화 분야 강의

국제·경제·평화 분야 강의 전북도인재개발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 이해를 통해 전라북도가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 한국의 미래준비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준비 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도, 시군 공무원 70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2회 실시되고, 1기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시작된다. 강사진은 통일교육원 남북경협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고, 국제경제와 평화·통일 환경,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한반도 미래상과 평화·통일의 지자체 역할 3개 강좌로 편성하여 강의와 통일전망대 견학, 분임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신동원 전라북도인재개발원장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통일문제의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에 대비한 공직자의 선도적인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전북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평화·번영·통일로 가는 한반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인식을 새롭게 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원기(1962. 12. 13.생 2018. 11. 9.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 법원 유송용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9년164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유송용
▶ 피상속인: 망 김원기(1962. 12. 13.생 2018. 11. 9. 사망)
최후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설로 103 (오산리)
▶ 공고인: 김혜리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9. 2. 26.
▶ 공고기간: 2019. 3. 6. ~ 2019. 5. 5.
▶ 주소: (청구 대리인 장동식 법무사 사무실) 대전 동구 대천로 692, 201호(인동) 042-621-808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